



주목해야 할 글로벌 3대 경제산업 이슈

주목해야 할 글로벌 3대 경제산업 이슈

목 차

제1장 2023-2024년 글로벌 경제 무역 동향과 전망	5
제2장 2024년 3대 주요 경제산업 이슈	8
1. 생성형AI가 가져온 성장, 글로벌 규제와 선점경쟁 가. AI의 일상화, 업무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나. 각국의 AI규제 움직임과 거버넌스 선점 경쟁	9
2.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14
3. 지속가능성(ESG) 의무 본격화, 공급망 기업 대응 필수	18
제3장 결론	23
[참고] 2024 이슈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4

요약

2023-2024년 글로벌 경제 무역 동향과 전망

- ('23) 주요 기관들, '23년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정책 및 선진국의 수요둔화와 신흥국 교역 감소 등이 요인
- ('24) 세계은행(WB, 24)은 '24년 글로벌 교역이 전년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기관들은 동 기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4~3.1%로 전망
- * UNCTAD('24.3)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조정, 경제성장전망 상향, 환경관련 품목(EV,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 증가에 따라 '24년 교역이 증가할 것을 전망

2024년 글로벌 주요 경제산업 이슈와 영향 요인

- KOTRA는 국내 전문가, 해외 무역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3대 경제산업 이슈를 도출
- * 국내 학계 및 산업계의 정치, 통상, 산업 전문가 18명(심층 인터뷰)과 KOTRA 해외지역 본부장 10명, 그리고 KOTRA 기업 고객 120명 대상 설문조사('23.12-'24.1)

- ① **생성형AI, 글로벌 규제와 선점 경쟁** '24년은 생성형 AI의 두 번째 변혁기이자 중추적인 해로, 각국의 AI규제 움직임과 기술 개발 및 거버넌스 선점 경쟁 지속 중

▲(중국)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규제 시행('23.8), ▲(EU) EU AI법 합의('24.2, 시행은 '25년부)
 ▲(미국) AI안전 행정명령('23.10), 클라우드 규제('24.1), AI안전연구소 민관협력 컨소시엄('24.2)
 ▲(글로벌)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AI Safety Summit): 한국(5월), 프랑스(11월) 개최

- ②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선진국, 신흥국 등에서 자국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책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부국의 원광 등 수출통제 트렌드도 지속

▲(미) IRA 해외우려기관 규정 시행('24.1월-), ▲(중) 신에너지차 기준 강화, ▲(일) GX전략 등,
 ▲(EU) 배터리법 단계적 시행(2.18-), ▲(사우디) 지역본부 유치정책(Program HQ)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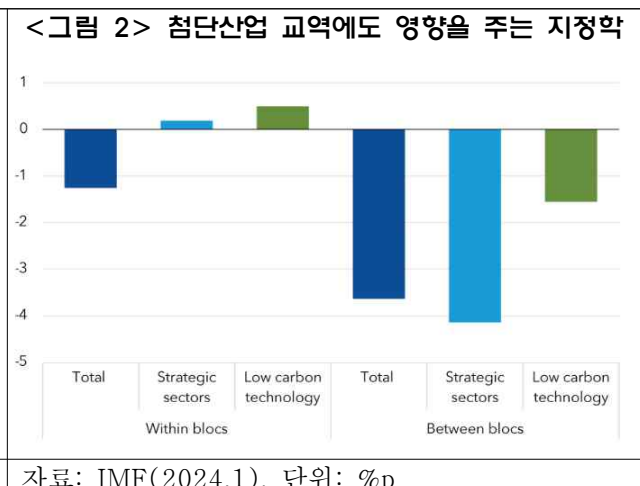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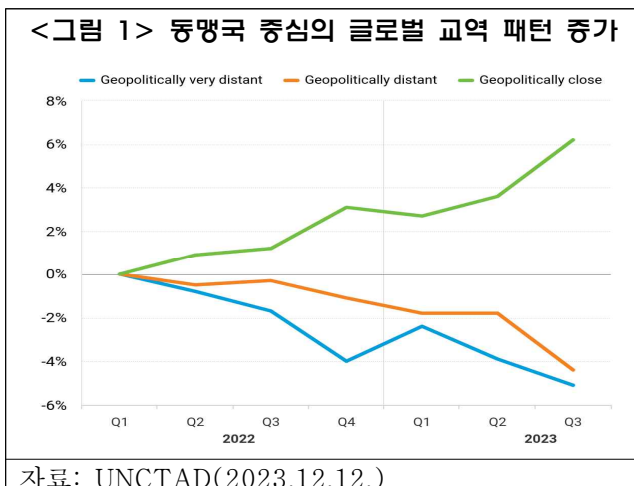
- ③ **지속가능성(ESG) 의무 본격화** 미국, EU등의 지속가능성 법안이 본격화되며 역내 기업 뿐 아니라 역외 기업 및 공급망 내 납품 기업(Scope3 포함)의 실질적 대응 필요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항공규정(ReFuel) 1월부 적용, 산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EUDR) 12월부 시행 예정, 공급망실사법 의회 합의('24.3), 4월 발효 전망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확대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의무화('24년말까지 대응 필요), SEC 기후공시

2023-2024년 글로벌 경제 무역 동향과 전망

□ 2023년 글로벌 무역 회고와 2024년 전망

- (**'23년 글로벌 교역 둔화**) 세계은행(24.1)은 '23년 글로벌 교역이 지난 50년 중 가장 더딘¹⁾ 성장세(0.2%)를 보였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UNCTAD(2023.12)은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규모가 감소('22년 32.2조→'23년 30.7조 달러)한 것으로 분석
- (**교역감소 주 요인**) UNCTAD(2023)은 '23년 교역 감소의 주 요인으로 고금리에 따른 경제 부담, 미중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및 보호무역정책과 더불어 선진국의 수요 둔화와 동아시아, 중남미의 역내 교역 감소 등을 언급
 - * 특히, 지정학적 긴장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정책이 강화, 각국이 내부 중심의 산업정책을 구사하면서 글로벌 교역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언급
- (**동맹국 교역**) 최근 주요국은 정치적 동맹 관계의 파트너와 교역을 선호하는 등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2년 말부터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남.
 - * '22년 이후 교역은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국가(녹색선)를 위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정학적으로 거리를 둔 국가(주황색), 적대국(푸른색)간의 교역은 크게 감소함.
- (**첨단산업 교역 영향**) 러-우 사태 기간('22.2Q-'23.2Q) 중 블록 내의 교역은 감소하였으나, 전략 분야, 저탄소 기술 교역은 이전 대비 상승하였음. 한편, 블록간²⁾ 교역은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IMF, 2024)



1) 단, 글로벌 경기침체(Global recession) 등은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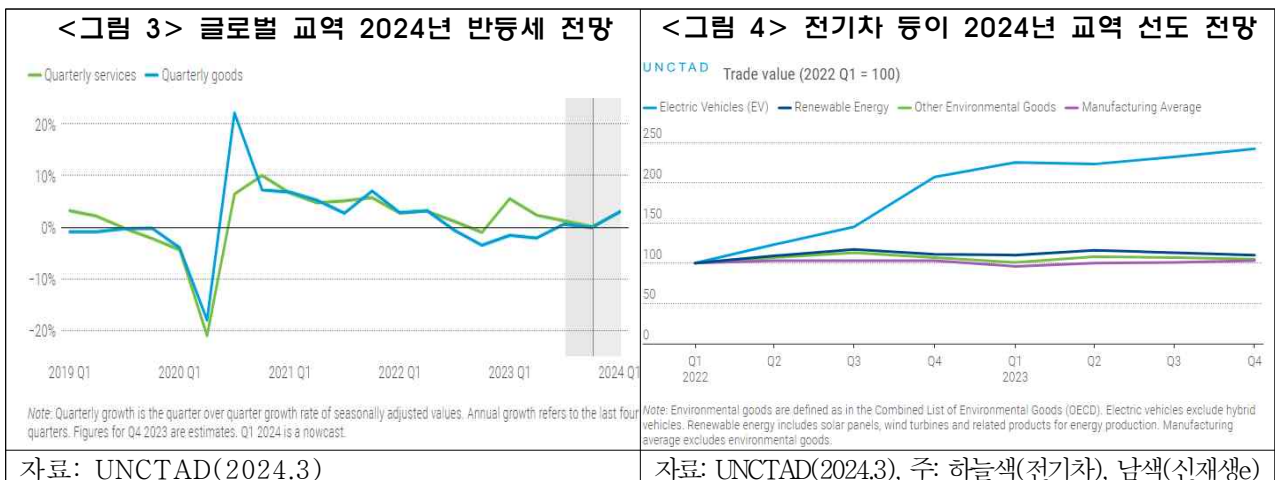
2) 블록구분: 서구(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구(중국, 러시아, 시리아, 벨라루스)

- (**'24년 경제/교역 전망**) 세계은행은 '24년 교역이 전년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기관들은 '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4~3.1%로 전망
- *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대응 정책, 원자재 가격,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등 언급 <표 1>

<표 1> 주요 기관의 2024년 글로벌 경기 전망 및 주요 경제/교역 영향 요인

	IMF	OECD	UNCTAD	World Bank
성장 전망	('23) 3.1% ('24) 3.1%	('23) 2.9% ('24) 2.7%	('23) 2.4% ('24) 2.5%	('23) 2.6% ('24) 2.4%
주요 영향 요인	<상방요인>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감,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하방요인> 1. 중국 부동산 위기 2. 원자재가 변동성 3. 인플레이션 4. 재정여유 부족에 따른 부채, 조달비용 상승 등 5. 재정조건 완화: 신흥국 달러가치 절상, 자본유출, 부채위기↑	<상방요인> 1. 타겟 인플레이션 달성 <하방 요인> 1. 지정학적 긴장(이-하) 2. 내수 중심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생산성 감소 3. 원자재가 변동성 4. 중앙은행 기준금리 5. 인플레이션, 실업, 파산 6. 글로벌 금융 긴축, 신흥국 취약성 증가	1. 글로벌 성장 둔화 1. 주요국 고금리와 산업 생산 감소(PMI) 2. 원자재가 변동성 3. 공급망 연장(멕시코, 동아시아에는 기회) 4. 보조금과 무역제한조치 5. 원자재 위주 교역	<상방요인>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가능성 <하방요인> 1. 지정학적 긴장 2. 무역규제 강화 3. 중국 경기둔화 등
	자료: IMF(2024.1), (2023.10)	자료: OECD(2023.11)	자료: UNCTAD(2023.12)	자료: World Bank(2024.1)

- IMF는 '24.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1.30)를 발표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진 속도감,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24년 성장전망을 소폭 상향조정 ('23.10월 전망치 2.9%→ '24.1월 전망치 3.1%)하였음.
- UNCTAD³⁾은 '24.3월 교역 전망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조정 및 경제성장 전망 상향조정, 환경관련 품목(특히 EV 등) 수요 증가에 따라 '24년 교역 증가를 전망



3) UNCTAD은 2023년 12월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무역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규정한 바 있음.

□ '24년 다보스 포럼 선정 세계 최대 리스크는 “가짜뉴스”와 “기후위기”

- 세계경제포럼(WEF)이 '24.1월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위협할 요소는 AI 발전에 따른 “허위정보”로, 슈퍼 선거의 해인만큼 부작용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전망
- 그밖에 극단적 기후현상,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 불안, 국가간 무력 충돌, 경제적 기회 부족, 인플레이션 등이 주요 리스크로 언급되었음.

<표 2> 2024 다보스포럼 선정 글로벌 단기, 중기 리스크

단기 리스크(2년 내)		중기 리스크(10년내)	
순위	주요 이슈	순위	주요 이슈
1	오정보 및 허위정보(disinformation)	1	극단적 기후 현상
2	극단적 기후 현상	2	지구 생태계의 주요 변화
3	사회적 양극화/극단화(polarization)	3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파괴
4	사이버 안보 불안	4	천연자원 부족
5	국가간 무력 충돌	5	오정보 및 허위정보(disinformation)
6	경제적 기회 부족	6	AI 기술의 부작용
7	인플레이션	7	비자발적 이민
8	비자발적 이민	8	사이버 안보 불안
9	경기 둔화(downturn)	9	사회적 양극화/극단화
10	환경오염	10	환경오염

자료: WEF(2024),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II

2024년 주요 이슈

□ KOTRA는 국내 전문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 관련 설문을 시행

* 국내 학계 및 산업계의 정치, 통상, 산업 전문가 18명(심층 인터뷰)과 KOTRA 해외지역 본부장 10명, 그리고 KOTRA 기업 고객 120명 대상 주요 이슈를 설문조사(2023.12-2024.1)

- (경제통상 전문가) 국내 주요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결과, '24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미 대선, 글로벌 경기, 생성형AI, 산업정책, 지속가능성(ESG) 등을 언급
- (KOTRA) 10개 지역 본부장들은 작년에 이어 모두 공급망 재편(1위, 27%)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그린전환(2위, 12%), 소비(3위), 첨단산업과 AI/DX(4위) 및 ESG(5위)를 주요 이슈로 선정
- (기업) 기업에서는 '24년 관심이슈로 공급망 재편(26.4%), 지속가능성(ESG) (22.5%), 보호무역주의(10.9%), 디지털 전환(DX)(9.3%), 퓨처테크(AI활용)(5.4%)를 주요 이슈로 응답(2023.12월 설문결과, 중복응답)

□ 본 고에서는 우리기업 관심도가 높은 경제/산업 3대 이슈*를 선정하여 정리함.

* ①생성형AI, ②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③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그림 5> 글로벌 주요 이슈 도출(설문조사 결과)

	국내 정치 경제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결과 (n=18)	KOTRA 해외지역본부장 설문결과(n=10)	기업고객 대상 2024년 관심이슈 설문결과(n=120)
1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	공급망 재편	공급망 재편
2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경기	산업 정책 / 정부 인프라 투자	지속가능성(ESG)
3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블록화	그린 전환(친환경에너지 등)	지정학적 이슈
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소비시장 변화	보호무역주의
5	생성형 AI, 규제 및 경쟁	디지털전환/AI/첨단산업	디지털 전환
6	그린전환과 산업정책의 시대	ESG 의무화	디스인플레이션
7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지정학적 이슈 등 정세변화	AI활용 등

이슈 1 생성형AI가 가져온 성장, 글로벌 규제와 선점경쟁

- ◎ (2024)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AI Safety Summit) 한국('24.5월), 프랑스(11월)에서 개최
- ◎ 미국, AI안전 행정명령('23.10)에 이어 AI안전연구소 민관협력 컨소시엄 설립
- ◎ EU 인공지능법(AIA, AI Act, 최종 통과, 2025년 시행) :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규제법
- *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제미니 등이 시장 출시 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

가. AI의 일상화, 업무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 (두 번째 변혁기) '23년이 생성형 AI가 업무에 도입되는 첫 변혁의 시기였다면, '24년은 본격화 시기, 다양한 영역서 업무 활용을 시작할 것(KPMG 등)

- 국제사회 및 주요국은 AI를 올해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고 기술 발전 및 생산성 향상, 규제 이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중

- ◆ 2024 CES('24.1.9-12): 초개인화된 AI 기술의 등장, AX(AI Transformation) 시대의 출발 자동차, 모빌리티, 가전 등에 생성형AI와 챗봇 도입
- ◆ 54차 다보스 포럼('24.1.15-19): 54차 다보스포럼에서 경제사회의 원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AI)이 세부 주제 중 하나로 언급되었으며, 챗GPT 개발사인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참석
- ◆ 11회 세계정부정상회의(WGS, '24.2.12-14): 샘 알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

- (생성형 AI 급증) 생성형 AI의 시장은 지속 성장 예정으로, 챗GPT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툴이 기업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생산성 극대화에 기여 예정

- Gartner('23.10)는 '26년 80%이상의 기업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모델을 사용하거나, 생산 환경에서 생성형AI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23년초 5% 미만 대비 급증

- * 2024 Gartner 선정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3개가 AI 관련: ▲AI 신뢰 리스크 보안 관리(AI TriSM)⁴⁾, ▲AI 증강개발(Augmented Development)⁵⁾, ▲보편화된 생성형 AI (Democratized Generative AI)

- Goldman Sachs('23.4)는 생성형 AI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 7%(7조 달러 상당) 성장과, 생산성 1.5%p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4) 2026년까지 AI TRiSM(Trust, Risk, Security Management, 데이터 신뢰성 지원 정책 및 프레임워크) 제어 기능을 적용하는 기업이 오류/불법 정보를 최대 80%까지 줄여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것(Gartner, 2023)

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코딩, 테스트시 생성형 AI, 머신 러닝 등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

- Bloomberg Intelligence('23.6)는 향후 10년간 생성형 AI시장의 연평균 42% 성장*을 전망('22년 \$400억→ '32년 \$1.3조)하였으며, 코파일럿(copilot)⁶⁾, 특화 어시스턴트 등 수요 증가로 2,800억 달러 상당 신규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을 전망
* 대형언어모델(LLMs), 디지털광고, 특화소프트웨어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

□ (범용 AI* 성장) 생성형 AI는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기술로 간주, 산업 전반의 획기적 혁신을 불러올 전망

* 범용AI(AGI: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데이터를 일반적인 인간에 가까운 지능으로 생성하는 AI)

- 현재까지 로봇의 대부분을 산업용 로봇이 차지한다면 미래는 휴머노이드 기술이 대체: AI기술 발전 이후의 스텝은 휴머노이드와의 결합(이재훈⁷⁾, 2024)

- ◆ 구글 딥마인드는 구글이 다양한 목표에 맞춰 명령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기술인 AutoRT, RT-Trajectory를 발표했으며, 동 기술은 LLM(대규모 언어모델)과 LVM(비전언어모델) 및 로봇 제어 모델을 결합한 것
- ◆ ('24.1) 로봇스타트업인 Figure*와 독일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사 공장 생산라인에 Figure 01(생성형AI를 탑재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배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22년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로봇개발 유니콘
* 현재 아마존 '디지트',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등 다수 업체들이 인간형 로봇을 개발 중으로, 생산공장 투입 성공시 세계 최초
- ◆ ('24.2) 오픈AI와 Microsoft는 FigureAI*에 대규모 투자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실제 투자 진행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과 생성형 AI의 기술적 접목 가능성 확대 예상⁸⁾(로봇신문, '24.2.1)

- 한편,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미국 식음료계에서는 AI 기술 등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뉴욕무역관, 2024)
* 드라이브스루 매장 사례: 맥도날드, 자동화 컨베이어벨트 도입 / 웬디스(Wendy's), 관련 AI개발 중, 주문 패턴을 분석해 음료/사이드 메뉴를 추천해 추가 매출



6)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은 대형언어모델을 결합한 서비스, 일례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서비스(워드, PPT, 아웃룩, 팀즈 등)에 AI를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
7) open.ads(2024), "[2024 전망] ⑥로보틱스, 생성형 AI와 만나 더 똑똑해진다"
8) 한편, 오픈AI는 '23년 3월에도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 1X 테크놀로지에 투자

나. AI규제의 중추적인 해... 각국의 AI규제 움직임과 거버넌스 선점 경쟁

□ (AI 거버넌스 경쟁 본격화) '23년이 생성형 AI 혁신이 시작된 해라면, '24년은 AI규제의 해, 국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간 긴장이 고조되는 해가 될 전망

○ 주요국의 AI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AI규제 기관 선점 경쟁 본격화(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EU, 미국, 중국, 영국, EU는 물론 멕시코 등 신흥국에서도 AI규제 노력

- AI 거버넌스는 알고리즘 수립방식과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윤리, 데이터 접근성 허용 등 복잡한 기술적, 제도적 사안이 다면적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

◆ “미국, EU, 중국, 인도가 각기 다른 접근법을 선택하여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 (자문위원1)

□ (슈퍼 선거의 해와 딥페이크) 2024년은 AI대선이 될 것...딥페이크 활용 움직임

○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전쟁이 주효해질 것. 딥페이크 제작, 유포 및 선거시스템 공격 가능성(골드만삭스, 2023 등)

* '24.1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음란 딥페이크'가 X를 통해 전세계로 퍼지면서 딥페이크 활용 음란물 규제에 대한 목소리 증가

○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며 기존의 신뢰 기반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음. 주요국 선거에도 영향 가능성 (자문위원2)

○ AP뉴스('23.12)는 “'24년 미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 시카고대 드 메스키타 학장은 '16년, '20년이 “SNS 선거였다면, '24년은 “AI대선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미 공화당전국위원회, 2023.5월 AI가 만든 가짜 디스토피아 이미지로 만든 선거광고 공개
- '24.1월 치러진 뉴햄프셔주 예비선거(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본판 딥페이크물 음성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유포되며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24.1.22.)
- 슬로바키아, 2023.9월 총선 이틀 전에 친미 성향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페이크 음성 파일 파장... 친 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프랑스23)
-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틱톡서 가짜 정보 유포.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가짜 정보가 증가('22년 1,400개→ '23년 최소 1,800개)하였으며, 동 자료는 주요 소셜미디어 등으로 유통됨.
-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하이에르 밀레이 후보가 특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경쟁자와 본인에 AI콘텐츠 제작

- **(미국내 규제)** 미국에서는 주정부별로 정치광고 내에 딥페이크 사용 규제중
 - *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텍사스, 워싱턴주 등에서 정치광고 딥페이크 규제 법안 통과.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주 등에서도 유사 법안 발의
 - * 미시간주, 선거전 90일 이내로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하고 정치광고에 AI 사용여부를 밝혀야하는 법안에 서명([전자개인정보센터EPIC, '23.11](#))

□ **(글로벌 AI경쟁 심화) 미중 경쟁이 수출 통제(export control), 규제(sanctions), 관세, 산업정책, 투자 스크리닝 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형태로 강화될 가능성**

- **(동맹국)** 특히 한국, 영국 등 지정학적 경합국(Geopolitical Swing States)*은 의미 있는 역할 예정, 추후 타 국가들과 동맹,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골드만삭스, 2023](#))
 - * 영국, UAE,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인도
- **(중국)** 중국은 강력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AI기술을 개발 중이며, '23.8월부 생성형 AI 규제*(「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를 세계 최초 시행)하였으며, '23.10월 블랙리스트를 도입해 사실상 해외AI기업 중국 진출 방지
 - * 생성형AI의 결과물이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건지하며, 국가권력,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중국 생성 AI시장 규모는 '22~'26년 연평균 300% 이상 성장 전망 (전자신문10)
* ('23년) 50억 위안→ ('25년) 800억 위안→ ('26년) 1,700억 위안

◆ '23년 기준 13개 AI 기업과 기관이 독자적 생성 AI모델 발표('21년 3개)

바이두 '오픈A 라이벌' 표방한 '어니' 공개	알리바바 자체개발 대형언어모델(LLM) '통이치엔윈'
샤오미, 자사 '하이퍼OS'에 AI 탑재	화웨이, 자체 AI칩 개발

◆ 중국은 강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AI기술을 개발, 민간부문내 치열한 경쟁과 협력 지속: ('15) 중국 정부 주도 '천망(天網)' 계획→('16) 바이두의 '대뇌 프로젝트'→ ('17) AI 2030 발전전략 발표

◆ 최근 중국은 민관협 협력모델을 토대로 빅테크+벤처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협력 중

* 빅테크: BATH, 벤처기업: 상탕(商湯), iFLYTEK, 청두이윈커지(成都醫雲科技) 등
연구기관: 칭화대, 후단대, 무한대와 지위엔(智源) 연구원, 중커위엔(中科院) 자동화연구소 등

- **(EU AI법 합의)** AI분야 글로벌 리더십 선점을 위해 미중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EU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을 채택('23.12 합의, 2년뒤 시행)
 - * EU에서 자율주행차, 의료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 의무, 규정 위반시 최대 3,500만유로 혹은 전세계 매출의 7% 과징금

9) 중국의 법률제정속도가 느린 반면, 디지털 분야만은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

10) '전자신문(2023), "[핀테크 칼럼] 중국 생성 AI, 강력한 민관학(民官學) 협력모델로 미국 맹추격", (2023-11-30)

- (미국) 미국은 행정부 주도로 AI규제 행정명령('23.10.30) 및 클라우드 규제* ('24.1.29)와 더불어 대규모 민관협력 AI안전 연구소 컨소시엄 발족('24.2.12)
 - 클라우드 규제('24.1)를 통해 중국 등 해외 기업이 자국 기업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LLM 등 AI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 기술 경쟁력 보호 목적
 - 행정부는 구글, 오픈AI, MS,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는 물론 애플, 엔비디아, JP모건, 웰스파고 등이 200여개사가 참여해, 미국 주도의 AI패권 확보를 목적
- * AI법 관련 의회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부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

<표 3> 주요국의 AI 개발 및 규제 정책 및 법안 동향

국가	주요 내용
글로벌	('23.11) · 제1회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AI Safety Summit) - 한, 미, 중, EU 등 28개국 관계자 및 기업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있는 AI기술 보장을 위해 포용적으로 협력"하는 블레츨리 공동선언에 합의
	('23.12) · IBM, Meta-파트너 기업 50여 곳(AMD, DELL, Oracle, 일본 도쿄대학, 미국 텍사스 대학, 버클리대학, 뉴욕대학, 프랑스 노트르담 대학교 등)과 함께 AI동맹(AI Alliance) 결성 *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벤치마크 도구와 평가기준 마련, 인공지능 솔루션의 규제 대응과 교육콘텐츠 개발 관여
미국	('23.10) · ('22.10)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권리장전 청사진 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5대 원칙 · (바이든 대통령, AI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 발표('23.10.30) - AI기업은 자사 AI모델 공개 의무,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등 필요 - AI개발기업의 안정성 평가 의무화: 외국인/기업도 안정성 평가 및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하는 등 전세계 AI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김경숙, 홍경식 202311)
	('23.11) ·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AI안전연구소(AISI) 설립 계획 발표
	('24.1) · 상무부. 미국 클라우드 업체에 외국고객 공개 의무화: 중고객 AI모델 학습 정보 신고 목적
	('24.2) ·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민관합동 AI안전 연구소 컨소시엄 발족
	('24.2) · 바이든 대통령, 상무부에 중국산 커넥티드 카에 대한 조사 지시
중국	('23.4) ·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CAC),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방안"을 통해 인공지능 챗봇 업체가 국가검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초안 발표
	('23.8)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조치"(7.13 발표, 8.15일 발효)
	('23.1) · 얼굴 및 음성 데이터를 변경하는 콘텐츠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시행('23.1.10)
	('23.10) · 생성형AI 서비스 제공기업을 위한 보안 지침을 발표하고 불순한 데이터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AI학습을 금지: 콘텐츠에 "사회주의가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국기업의 생성AI서비스가 중국에 진출하거나 반대로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
영국	('23.11) · 영국에서 제1회 AI안전 정상회의 개최 및 AI를 규제하는 'AI안전연구소' 설립 방침 발표
EU	('24.2) · EU AI법: △허용불가 위험, △높은 위험, △생성AI, △제한된 위험 등 4대 위험에 따른 규제 범위 적용 - ('23.12.9) 합의, ('24.2.2) 만장일치 찬성, ('24.4) 유럽의회 전체 표결, ('25) 시행 예정 - 영향: 챗GPT 등 생성형 AI모델과 얼굴 인식, 지문 스캐닝 등 생체인증 톨에 대한 규제를 포함. 안전조치 및 제한사항 위반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의 7%가 과징금

11)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AI)행정명령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480호(2023.11.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 2 | 그린전환 본격화 속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 ◎ (2024.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량 세액공제 내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
- ◎ (2024.1) 중국 신에너지차 기준 강화(2023.제32호 공고)... 세금감면 영향(5월까지 유예)
- ◎ (2024.2.18-) EU 배터리규정(전기차 등 모든 배터리 관련 재활용 제도 도입) 단계적 시행
- ◎ (2024.1) 사우디의 지역본부 유치정책(Program HQ) 인센티브 시행
- ◎ (~2025) UAE, 2025년까지 연방정부 및 국영기업의 재화/서비스 조달 중 42% 이상 현지화 추진

□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주요국들은 그린경제의 본격화 속 자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 지원에 박차

◆ “24년에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제품 혹은 부품의 엄격한 소싱 요건을 두고 미-EU간 경쟁 혹은 미-중간 경쟁 가능성”(자문위원3)

-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책)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자국내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자국 위주의 산업정책이 이어지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산업세액공제, 친환경차 세액공제, 반도체법 R&D보조금 지원,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내 투자유도
 - (EU) 핵심원자재법,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세 등 신규 정책을 통해 자국내 친환경, 첨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역외 기업들은 추가대응이 필요
 - (일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 혜택 도입('23.12월)과 더불어 녹색전환 총괄 정책인 GX추진전략('23.7) 본격화 전망
 - 기타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기준을 각각 강화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
- (신흥국 투자유치)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과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지속
 - (인도) 인도는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해 '21.12월 파격적 인센티브 제도인 '반도체 인도 프로그램(Semicon India Program)'과 '반도체 미션(ISM)' 조직을 만들고, 1차('22)를 거쳐 2차('23)에서 100억 달러 규모 인센티브를 발표
 - * 인도 출신 엔지니어, 전세계 반도체 설계자의 약 20% 차지(인도 비즈니스투데이)

- (멕시코) 멕시코 재무부는 배터리, 자동차 엔진, 의약품, 의료기기, 비료 등 10개 산업 대상 투자 세액공제 시행령 승인('23.10월)
- (중동 현지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4.1월부터 '지역본부 유치정책(Program HQ) 인센티브*를 시행, UAE는 '25년까지 연방정부 및 국영기업 재화/서비스 조달 중 42% 이상을 현지화 추진, 참가기업 확대(5천개사→ 7.3천개사)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중동 지역본부(regional HQ)를 설립하지 않은 다국적기업은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입찰이 제한됨. 별도의 RHQ라이선스 취득 및 현지직원 채용 등 투자부 지정 필수 활동 이행 필요, “산업별, 기업별로 판단기준이 상이”

<표 4> 주요국의 친환경 및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위주) 제조업 육성정책

국가	주요 정책	주요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2024.1~) 청정차량 세액공제 기준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적용
	반도체과학법 (Chips Act)	- 반도체산업 부양을 위해 520억 달러 상당 지원(25% 투자 세액공제 포함)
	청정경쟁법안(CCA)	- (2024) 미국판 CBAM인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단계적 시행
EU	핵심원자재법(CRMA)	- 리튬, 니켈, 알루미늄 등 핵심광물을 EU내에서 일정 비율 가공, 재활용하도록 규제, 2030년까지 광물수입 비중 65% 이하로 감소
	배터리규정(EU Battery Regulation)	- (2024.2.18.) 배터리규정* 세부 규정별 위임규정 단계적 시행 *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 안정성 입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23.8월 발효되었으나, 10개 이상의 하위법령들이 '24~'28년 단계적 시행
	탄소국경조정제 (CBAM)	- (2023.10.1.~2025.12)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 EU역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제품군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 (2026.1~) 전환기 종료, 시행 본격화로 미준수시 추가 비용 불가피
일본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 (2023.12.13.)	- 적용대상: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항공연료(SAF), 그린스틸, 그린 케미컬 등 5개 - 적용 내용: 국내 생산 판매량에 따라 반도체는 20%, 기타 4개 분야는 최대 40%까지 10년간 법인세 우대(전기차는 대당 40만엔) - 적자시 세제우대 이연: 반도체 3년, 기타 분야 4년간 우대 혜택 이연
	GX추진전략 (2023.7.9.)	- 화석에서 청정에너지로 산업/사회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 총괄 정책 - (공급)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연료/CSS - (수요) △에너지효율화, △제조업의 연료, 원료 전환,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GX 투자 달성 목표를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 등을 제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공개, 2023.9)	- (2024.1.1.~)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시행 (총 78종, 2023.12.16.일부 계약) -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60점 이상) -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4.1.04.)
영국	CBAM	- 2027년부터 탄소국경제(CBAM) 도입 선언-EU(2026년부)와 동일) - 적용대상: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기준 강화 (2024.1.1.~2025.12.31.)	- 2024.1.1.일부로 구매세 면제 기준 강화(1회 충전시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저온 주행시 배터리 성능 감소율 등 세부 규정 강화) - 2024.5월까지 유예기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2023.12.27.)

자료: 언론, 발표자료 등 기반 저자 자체 정리

□ (자원) 핵심광물 확보 경쟁 및 자원부국의 자원민족주의 지속

- '24년에도 주요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부국은 전략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내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구하는 양상 (자문위원4)
- * 최근 전기차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개발 속도에는 일부 부침이 있으나, 큰 틀에서 첨단산업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다자간 협의체 구축 및 주요국가와의 양자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5> 최근 미국의 주요 다자간, 양자간 협력 현황

구분	기구/국가	시기	주요 협력 내용
다자	ERGI (10개국)	2019 설립	- 미 국무부 주도의 에너지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 참여국(10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보츠와나, 페루, 아르헨티나,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필리핀, 잠비아 등
	Quad (4개국)	2023.5	-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된 안보협의체 - ('23.5)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확보를 위한 쿼드투자자네트워크(QUID, Quad Investors Network) 구축 합의
	PGII (7개국)	2023.5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펀드: G7 국가가 2027년까지 총 6천억 달러 투자 예정이며, 미국은 이 중 2천억 달러 지원
	MSP (13개국+ EU)	2022.6 출범	-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 ('22.9)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가 참여해 총 13개국 - ('23.2) 아프리카 7개 협력국과 차관회의 개최 - ('23.5) 협의에 아르헨티나 초청, 리튬자원 논의 - ('23.10) 수석대표 회의, 자원부국 및 금융기관 참석 - ('24.3) 에스토니아 신규 가입으로 회원국 15개, "MSP포럼" 설립 합의
	IPEF (14개국)	2022.5 출범	- ('23.5) 최초의 공급망 국제협정인 pillar2 타결 - ('23.11)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에서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 제련용 화학제품과 기계 무역 촉진 등을 합의
	미-캐나다-멕시코	2023.1	- 핵심광물 지도(mapp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튬 매장량 공동 조사 추진에 합의
	양자	미-일본	2023.3 체결
미-호주		2023.10	- 기후,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전환 협약, 광물 탐사개발 및 기술교류 등 협력 강화 - 핵심광물 산업에 20억 호주달러 투입, 코발트, 갈륨 등 채굴과 처리시설 용량 확대
미-캐나다		2023.3	- 정상회담 계기 1) 배터리용 핵심광물 채굴/가공에 2.5억 달러 지원, 2) 청정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첨단 제조 가공 재활용 지원에 각 15억 캐나다\$ 투입 합의
미-인도-네시아		2023.11	- 대통령 방미계기 관계 격상: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광물, 사이버 보안 등 신규 협약 - DFC(1.31억\$) 제공, USAID(폐기물 처리시스템 투자)
미-칠레		2023.12	- 미-칠레 FTA 기 체결(2004), 칠레 리튬 확보 목적 양국간 조세 협약 11년만 발효 - ('24.3) 재무부 장관, 칠레 방문 계기 "향후 몇 년간 미국산 칠레 리튬 수입 증가할 것"
미-EU		2023.3 진행중	- 전기차 보조금 및 핵심광물 보조금 관련 협상 중
미-영국		2023.6 진행중	- 핵심공급망 강화 및 핵심광물 보조금 관련 협상 중

자료: 백악관(Whitehouse)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 기반 저자 정리, 박민경(2024)에서 재인용

- 과거에는 원유, 가스, 희토류 등 일부 자원에 국한됐던 자원 민족주의가 니켈, 코발트, 흑연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광물 전반으로 확대되며, 자원 부국은 광물 수출의 전략적 통제를 통해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 강화 움직임 (자문위원5)
 - (인도네시아) 니켈, 보크사이트 등의 원광(가공하지 않은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내에 정, 제련 시설 설립 필수, 현지 가공품 수출만 허용
 - (중국) 국가 안보 수호 목적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23.8)
 - (중남미) ①멕시코 정부는 리튬 국유화 법안을 정식 선포(23.2.)하고 기존 중국 기업 보유의 리튬 채굴권 취소(23.9) , ②칠레 대통령 리튬 국유화 선언(23.4)
 - (짐바브웨) 미가공 리튬 수출 제한 조치(22.12), 자국내 리튬 배터리 개발 요청

이슈 3 지속가능성(ESG) 의무 본격화...공급망 기업 대응 필수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글로벌(IFRS) 지속가능성공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EU항공규정(ReFuel): 연료 일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로 교체, △EU배출권거래제(EU ETS) 확대 적용 ◎ (12월) EU삼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EUDR) 시행: 커피, 코코아, 쇠고기, 콩, 고무 등 영향 ◎ (12월) 美 캘리포니아주 신규 기후데이터 책임법(SB253) 적용: 애플, 아마존 등 ◎ ('24.3.6)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의무화 발표, '25년부터 공시 의무 ◎ (10.21~11.1) COP16개최(콜롬비아),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 제출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23.1월 발효) 직원 1천명 이상 기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 ('24.5월) 캐나다 공급망 아동노동 방지법 시행 예정 ◎ ('24.3) EU 공급망실사법(CSDDD) 의회 합의(2024.3.19.), 4월 본회의 통과 후 최종 발효 예정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7.26.)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버 보안사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신설

□ 글로벌 공시 시행 압박으로 '24년 1월부로 공시기준 대응 필요

- '24년은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본격화 및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의 의무화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등 기업의 대비에 중요한 해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SDS), ② EU CSRD¹²⁾, ③ US SEC¹³⁾ 기후 관련 공시

◆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유럽 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안(Proposed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and Implications): 기업의 기후 리스크관련 재무적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 현재 국내 10개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바, 해당 기업들은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담. 또한 Scope3 배출량 공시는 면제되었으나, 자발적 공시가 가능하므로 미국 상장사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 가능성(법무법인 세종, 2024.3)

- (3대 공시 확정) ①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S1, S2 모두 1.1일부로 공식 공시기준으로 사용) 및 ②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모두 '24년 1월부로 적용, ③미 SEC의 기후 공시도 '24.3월 확정돼 '25년부터 적용 예정¹⁴⁾
- (공급망 점검 강화) 캐나다 공급망 아동노동 방지법(5월부), 미 캘리포니아주 기후데이터 책임법('24년중 시행), EU삼림벌채법('24년말부터 시행) 등 본격화

1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1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4) 단,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안대비 대폭 수정(Scope3 의무화 조항 폐지 등)하여 최종안이 발표되었으나, 논란은 지속되는 형국: 앨라바마, 알래스카, 조지아 등 10개 주는 해당 규정이 SEC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미 제11구역 항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둔 상태임(2024.3월 기준)

- (사전대응에 집중하는 기업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미준수시 처벌)되어, 기업들이 기존에는 ESG 환경 지표 대응시 사후 처리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사전 관리에 집중하는 추세 (자문위원 6)
- 주요 공시 시행으로 '25년부터 기업의 공개('24년 데이터) 의무가 생기는 만큼, 기업은 불이익 등 방지를 위해 '24년까지 데이터 관리 및 대응 인프라 마련 필수
 - * ISSB 공시 기준은 '25년부터 시행되나, 해당 데이터와 실행 시기 감안시 사실상 '24년부터 시행, EU 대형 상장사는 '24년 경영정보를 취합해 '25년부터 공시 의무
- 한편, 투자자 대상 기후 소송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기후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전과 달리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
 - * Baker McKenzie(2023), “2024년 ESG 소송 대상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금융기관 대상 기후소송 증가할 것”, ClientEarth, “기업대상 기후소송 리스크는 특히 유럽에서 향후 3-5년간 더욱 확대될 것”(임팩트온, 2024)

<표 6> 글로벌 3대 공시의 주요 내용

	글로벌 공시(IFRS ISSB)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미 SEC 기후공시안
적용시기	'24.1월부로 기준 적용 ¹⁵⁾ , 채택은 국가별로 적용	(ESRS 1차 표준세트) '24.1월 이후 5만여개 기업이 준수 필요 (2차 표준세트) 산업별 표준 (ESRS)은 채택 기한을 2년 연기해 '26.6월부터 적용 ¹⁶⁾ (비EU기업) '26년 6월부터 적용	(확정) 최종안 발표('24.3.6) * 세부안 발표('22.3월 (적용) '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적용대상	채택국가의 기업	약 5만개사 기업 (EU기업 전체 매출의 75%)	미 증시 상장사(상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규모 및 기타)
주요내용	기후 공시(S2):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정보/재무지표 공개 의무	'25년까지 Scope3 배출량, 노동자 처우, 생물다양성, 공급망 노동, 지역사회 영향 자료 제출	기업의 기후 리스크관련 재무적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가 골자(Scope3 배출 의무 삭제)

자료: 주요 발표내용 기반 재정리

15) 국제회계기준(IRFS)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3.6월 S1(일반), 기후공시(S2) 발표('23.6)

16) EU는 산업 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표준(ESRS) 채택 기한을 2년 연기('24.6.30→ '26.6.30)는 법안을 제안 (2023.10)하였으며, EU 법사위원회가 해당 법안 승인('24.1.24.)

- ◆ (글로벌 기준 국제사회지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글로벌 주요기업과 투자자, 회계법인, 비정부기구 등 400여개 기관이 ISSB 기준 채택을 지지하였으며, 英, 日,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ISSB기준을 바탕으로 2024-25년 중 공시 의무화 추진 중
- ◆ (Scope3 배출) 사업 운영에서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 등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주

□ [E]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의무화, EU산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 등이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산림파괴 방지 등에 공급망 전반의 고려가 필요

- (美 최초 기후공시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 최초의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인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SB-253)에 서명('23.10), 주 소재 기업이 공급망내 온실가스(GHG) 배출정보 의무 보고 대상으로 '24년 말까지 대응 필요
-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포함 캘리포니아주 소재 5,300여개사는 Scope 1/2('26년), Scope3('27년) 온가스 배출량 사업보고서 기재 및 공개내용 제3자 인증 의무 대상으로, 미준수시 최고 연 500만 달러 벌금 부과 예정

<표 7>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후관련 주요 법안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		재무리스크 보고(SB-261)
서명	(발효) '23.10월 발효, (적용) '25년부		
대상기업	주 내의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
의무공개	Scope 1/2	Scope 3	기후관련 재무리스크 및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
	온실가스(GHG) 배출량 2026년~	온실가스(GHG) 배출량 2027년~	
제3자 검증	합리적 검증	제한된 검증	
미준수 처벌	연 최고 500만 달러 벌금, 단 Scope3는 2027-30년은 보고서 미제출시에만 처벌		최대 5만 달러 이하 벌금
보고장소	디지털 플랫폼(규제기관에서 생성 예정)		
보고주기	연간		격년
기업대응	'24년 말까지 인프라 구축 필요 * '25년 배출량 측정 감사 프로세스 수립 및 인프라		자체 웹사이트

자료: 법률신문(2023) 등 언론보도 내용 기반으로 저자 자체 정리

- ◆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의 Anti-ESG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후 법안 통과 및 시행
- *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 중심으로 ESG에 대한 비판 지속: 텍사스, 인디애나주 등 10여개 주는 주정부 투자에 ESG 고려를 금지, 플로리다주는 반(反) ESG법 제정

- **(EUDR, 12월부)** '24년말부터 EU산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EUDR)이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품목*을 주로 EU지역에 수출하는 국가 및 업체의 대응이 필요

* 커피, 코코아, 쇠고기, 콩, 고무 및 팜유 수입업체는 공급망이 산림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미준수시 해당 지역에서 매출액의 최대 4% 벌금

- **(진행)** 미국,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린워싱 방지 등 입법 본격화 진행
 - **(탄소국경조정제)**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도입('23년말)과 더불어 미국판 탄소국경제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 추진 중

*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세금(55달러/톤)을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세금 부여

- **(그린워싱 방지)** ①EU 친환경 표시지침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¹⁷⁾('24.2.15), ②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24년 친환경 가이드(Green Guide) 개정판에서 그린워싱 행위의 구체적 지침과 최신 표준 수립 예정

* 그린워싱: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표 8>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주요 내용

	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법안	입법안 최종 승인 및 공식 발효('23.5)	최종 발효 전 ('22년 발의)
도입시기	(전환기간) '23.10~'25.12, (본격시행) '26.1~	단계적 도입: '24~ / 범위 확대(수입완제품): '26~
적용분야	철강, 알루미늄 등 수소 6대 품목 및 강철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포함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알루미늄 등 12개 수입 원자재에 탄소사(55\$/톤) 부과, 향후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 예정
특징	'24년부터 EU-ETS 범위 해상으로 확장	가중치 부여: 수입국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 차이(가중치)를 고려할 전망
보고방식	매 분기별 수입 제품 정보 포함 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위원회 제출 * 첫 번째 보고서 제출 기한 '24.1월 31일	매년 1~12월 탄소발생 내역을 차년도(~6.30)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관세 납부(~9.30)

자료: 국회미래연구원(2023) 등 관련 자료 종합

17) EU위원회는 EU친환경 표시지침(상임위 통과, 2.15)을 통해 입증 절차를 거친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

□ [S] 주요국에서는 노동 환경 및 인권 이슈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

- **(공급망실사법)**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공급망실사법을 기 시행중으로, 특히 독일은 '23년부터 시행되며 EU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15), 프랑스 인권실사법('17), 노르웨이 투명성법('21), 독일 공급망 실사법('23년 시행), 네덜란드 (아동 노동분야, '22년 시행)

- **(EU공급망실사법)**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환경 관련 실사 시행 후 관련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24년 EU이사회에서 합의(3.15), 의회 법제위에서 승인(3.19)되었으며, 이후 4월 본회의 표결 후 발효(5~7년 이내 적용 전망)

◆ EU 공급망실사법인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공급망 전체의 인권, 환경 실사 수행 및 정보 공개가 골자
 - 단, 배터리법(EUBR), 산림벌채금지법(EUDR),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산업별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의무는 이미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한국경제 기고문, 2024)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미국에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시행중, EU는 '강제노동 결부제품 수입 금지' 규제 준비 중('24.3.5일 3자 합의 완료)
 *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 (입법동향) 집행위 제안('22.9)→ ('23.10) 의회 입장 채택→ ('24.1) 이사회 입장 채택→ ('24.3.5) 3자 합의→ (EU 선거 이후 전망) 의회 승인(KOTRA 브뤼셀 무역관)
- **(캐나다)**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법안(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 Act)이 '24년 시행 예정

<표 9> 2024년 ESG 관련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일정

구분	내용	시기
글로벌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공시(SDS) ('25년 보고부터 적용)	'24.1월~
	UN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s Treaty)-175개국 정부간협상위 * 4차 회담(캐나다, 4월), 5차 회담(한국, 11월)	4월/11월
	COP 제 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하반기, 콜롬비아) -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 총회 제출 의무	하반기
미국 연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기준 확정('24.3.6)	공시('26~)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단계적 도입	'24

		연방거래위원회(FTC), 그린가이드에서 그린워싱 지침 업데이트	발표 예정
	주	캘리포니아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 및 기후 관련 금융위험법 서명('23.10, SB523) *California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대응 (~'24년말)
	캐나다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방지 법안 통과('23.5)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 Act	'24.1월 발효 5.31~ 시행
유럽	EU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시행('25년 보고부터 적용)	'24.1월~
		EU공급망 실사법-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24.3)	연중
		ReFuel EU 항공규정(ReFuel EU Aviation Regulation) *EU공항에 공급하는 연료 일부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로 교체	'24.1월~
		EU배출권거래제(EI ETS) 확대: EU항구 입항하는 모든 대형 선박 포함	'24.1월~
		배터리 규정 시행: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31년부 재활용기준 강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3년후 시행) 등	'24.2.18~
		EU 산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 EU대상 주요 수출국의 산림파괴 점검 필요	'24.12 시행
	독일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23년 발효) :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등 골자, '24년부터 적용대상 확대(종업원수 3천명→ 1천명 이상 기업)	'24년부 확대적용

자료: '24.3월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II

결론

□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4년 글로벌 주요 이슈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주요 기관들이 선정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은 이른바 “격동기”로 표현되는 '24년은 긴장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더불어 인플레이션, 원자재가, 공급망과 지정학적 긴장, 경기 방향과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올해 영향을 미칠 전망
 - KOTRA가 국내 전문가 및 해외무역관, 기업 고객 대상 설문 결과, 글로벌 리더십 변동에 따른 지형 변화, 경기변동에 각국의 정책대응, 공급망의 블록화, 생성형AI의 등장과 이에 따른 이슈, 산업정책, 지속가능성 공시 등 이슈를 선정
- 이러한 흐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주요 이슈와 더불어 연관 산업의 업데이트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IV

[참고] 2024년 변화와 관련된 KOTRA 해외무역관 뉴스

[KOTRA 발간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_ news.kotra.or.kr]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국별/권역별 진출전략_클릭시 이동
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워싱턴무역관 선정 미국 5대 주요 통상이슈(2024.01.05.)_클릭 - 美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2024년 1월 발효(2023.12.07.)_클릭 - 미국 리튬 배터리 재활용 정부 정책 동향(2024.01.12.)_클릭 - 美 FDA,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주요 내용(2023.12.01.)_클릭 - 2024년 캐나다 경제,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2024.01.15.)_클릭 - 2024년 캐나다 이민자 및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2023.12.27.)_클릭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벨기에의 EU의장국 기간 중 주목해야할 6대 통상 현안(2024.01.10.)_클릭 - EU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화학편)(2023.12.18.)_클릭 - 2024년부터 적용되는 EU의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1차 1월부, 2차 3월부 적용): 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2024.01.22.)_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2024.01.05.)_클릭 - 2024년부터 변화하는 프랑스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2024.01.04.)_클릭 - [프랑스]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리스트 발표(2023.12.19.)_클릭 - 독일, 알아두면 유용한 2024년 시행 규정(2024.01.03.)_클릭 - 2024년 영국 경제의 세 가지 키워드는?(2024.01.23.)_클릭 - 2024년 변경되는 영국의 주요 노동법과 이민법(2024.01.02.)_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정(2023.12.26.)_클릭 - 2024년 오스트리아, 이렇게 달라진다(2024.01.24.)_클릭 - 2024년 새해부터 변경되는 체코의 비즈니스, 경제 제도(2024.01.23.)_클릭 - [크로아티아] 에너지 개조 보조금 1억 2천만 유로 확보(2024.2월부터 접수)_클릭 - [크로아티아] 2024년 1월부, 73개 경제완화조치 단행(2024.01.05.)_클릭 - 2024년 스웨덴 경제전망(2024.01.24.)_클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회사법 5년만에 개정되어 2024.7월부 시행: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회사법 주요 변경사항과 우리 기업 유의사항(2024.01.23.)_클릭 -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2024년 베이징시 경제정책(2024.01.22.)_클릭 -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2024년 중국 수입 관세(2024.01.11.)_클릭 - [기고] 2024년 달라지는 중국 新회사법 주요 내용은(2024.01.11.)_클릭 - [중국] 中, 오는 2월 1일부 新 산업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시행(2024.01.03.)_클릭 - [중국] 中, 2024년 1월 1일부로 석탄 수입관세 회복(2024.01.03.)_클릭 - [중국] 中-태국, 3월부터 영구적으로 상호 무비자 시행(2024.01.03.)_클릭 - 중국, 2024년부터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기준 높인다(2023.12.17.)_클릭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日 주요 경제 이슈 캘린더(2024.01.10.)_클릭 - '24년 4월부터 일본 트럭 운전사에 대한 개정된 개선기준고시 시행(2024.01.15.)_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시범 시행 예정, 베트남 신속 통관을 위한 AEO제도의 활용(2023.12.26.)_클릭 - 베트남, 2024년 1월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2023년 베트남 경제 리뷰 및 2024년 베트남 경제에 미칠 요인들 (2023.12.18.)_클릭 -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2023.12.12.)_클릭 - 베트남, 2024년 7월부터 최저임금 6% 인상 예정(2023.12.29.)_클릭 - 베트남 정부, 2024년 말까지 분리배출 의무화 강력 시행 예정(2023.12.04.)_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표와 사회 변화로 예상하는 2024년 싱가포르 경제는?(2023.12.04.)_클릭 - 필리핀 2024년 예산안: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2024.01.07.)_클릭 - 필리핀, 돼지고기·옥수수·쌀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 인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_필리핀,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관세 인하 방안 추진(2024.01.22.)_클릭 - 말레이시아, '24년 1월 1일부로 LVG(Low Value Goods)에 판매세 부과(2024.01.15.)_클릭 -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 공약(2024.01.22.)_클릭 - 태국 2024-27 신규 전기차 보조금...태국내 전기차 생산 의무화; 태국 EV 3.5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전기차 시장동향(2023.12.13.)_클릭
중동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중동지역본부(RHQ)를 설립하지 않은 글로벌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 불가: 사우디 중동지역본부 유치정책 동향 및 전망(2023.03.09.)_클릭 - 이스라엘, 2024년 1월부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구매세 인상 예정: 이스라엘 홍해 운송 중단 관련 동향(2023.12.26.)_클릭 - 2024 이집트 경제 어디로 향하나(2024.01.26.)_클릭 -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3번째 임기 2024년 4월에 시작(2023.12.20.)_클릭 - 카타르 2024년 정부예산안(2024.01.23.)_클릭 - 2024년 오만 예산 훑어보기(2024.01.23.)_클릭 - [오만] 2024년부터 구권 사용 금지(2024.01.07.)_클릭 - 튀르키예 2024년 경제 전망(2023.12.27.)_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시범운영 확대 발표(2024.01.26.)_클릭 - 미 정부, 2024년 1월부 아프리카 4개국 AGOA에서 제외 결정(2023.11.23.)_클릭 - 케냐 정부, 2024년 1월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 시행(2023.12.18.)_클릭
인도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1.3일부 저가 철강제 스크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시행(2024.01.12.)_클릭 - 2024년 콜롬비아 경제 전망(2024.01.17.)_클릭시 이동 - 페루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비즈니스 기회(2024.01.10.)_클릭 - 파라과이, 2024년에도 안정된 경제 지속 전망(2024.01.03.)_클릭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기반 정리 / 2023.11~2024.1월 발표 뉴스 중 주요 연관 내용만 발췌하였음.

정 리

- 구미CIS팀 박민경

자문위원

- 강유덕
- 강선주
- 권기수
- 김대용
- 김종립
- 김형주
- 민정훈
- 박영후
- 박나리
- 송치웅
- 정구민
- 정지훈
- 조은교
- 이상급
- 이주미
- 오성주
- 천영삼
- 하상응

주목해야 할 글로벌 3대 경제산업 이슈

Global Market Report 24-001

발	행	일	2024년 3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02-3460-7677

• ISBN: 979-11-402-0896-8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